‘11년째 표류’ 어등산 관광단지 조속 추진을

주민들 재산권 행사 묶이고 市 행정 불신 우려…“연내 구체화해야”

11년째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어등산 개발이 장기표류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10여년 동안 중단되고, 시 행정이 들쭉날쭉하면서 행정 신뢰까지 잃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광주시의회 이정현(국민·광산1) 의원은 최근 열린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장기간 개발이 멈처서고 이의신청으로 인해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는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늦어도 올 연말까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법원 조정안을 마무리하고 새 사업자를 내년 상반기 중 공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7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민간사업자와의 소송 종결을 앞두고 ‘법원조정안’에 이의를 제기, 원점으로 회귀했다. 이후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어등산 관광단지 시민 협의체를 구성, 운영중이다.

기존 개발업체인 어등산리조트(주)가 낸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법원이 제시한 금액(229억원)으로 조정이 유력시됐지만, 시가 시민단체 의견 수렴을 이유로 막판 거부했다.

광주시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한 뒤 소송을 마무리하겠다는 복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법원조정에 반대했던 시민단체가 협의체의 핵심 구성원인 만큼 시의 뜻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소송이 길어지면 새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의 계획도 그만큼 멀어지고 10년 넘게 끌어왔던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한 발짝도 못 나갈 우려가 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광주시가 그동안 시민단체, 의회 등 20여명이 참여한 민간위원회를 1년 넘게 운영한 뒤 민간개발방식을 내놓고도 사실상 원점으로 회귀한 점은 광주시가 개발 의지가 없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광주시의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개발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행정의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다”면서 “민간위원회를 운영해놓고도 또 다시 일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이 생기면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시가 또 다른 ‘걸림돌’이 생길 경우 또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도시철도 2호선의 경우도 사업 원점 재검토에서 사업 추진, 건설방식 변경 등을 놓고 갈팡지팡하는 등 장기간 표류해온 선례가 있다는 점에서 어등산관광단지 개발사업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무엇보다 개발사업이 표류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도 지적했다. 그는 “어등산 개발 표류로 광산구 운수마을 주민들은 10년이 넘도록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등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보상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홍남순 변호사 제10주기 추모식이 지난 15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거행됐다. 추모객들이 행사를 위해 민주묘지 안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시대의 의인’ 홍남순 변호사 10주기 추모식

15일 5·18 민주묘지서

시대의 의인이자 1세대 민주인권변호사인 홍남순 변호사 10주기 추모식이 지난 15일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렸다.

‘대인 홍남순 변호사 추모모임’이 주관한 행사는 국민의례·참석자 소개·경과보고·약력보고·추모사·가족대표 인사말·헌화·분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정대철 전 국회의원은 추모사를 통해 “홍남순 선생님을 가리켜 용기있는 분, 민주화 투쟁에 헌신하신 분, 5·18 항쟁을 주도하고 수습하신 분, 인권변호사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제가 직접 겪어본 선생은 누구보다 균형 감각이 뛰어나고 겸손하고 자애로운 성품을 갖춘 분으로, 남을 돕고 배려하는 따뜻한 분이었다”고 그리워했다.

정 전 의원은 특히 “형편도 곤란하고 사서 다 읽지도 않는데, 웬 책을 그렇게 많이 수집하느냐”는 가족의 질문을 받고 홍 변호사가 “내가 책을 전부 읽지 않더라도 표지가 찢긴 고서적의 경우 우리가 고쳐만 두더라도 남이 좀더 편하게 읽지 않겠느냐”고 답했던 일화, 김영삼 정부 당시 국무총리 제안을 고사하면서 “나이 80에 정치에 나서면 안 된다. 후배들에게 양보하겠다”고 고사한 일화를 소개하기도 했다.

행사에는 윤장현 광주시장, 이낙연 전남지사, 정대철·이부영·박석무 전 국회의원, 이홍길 전남대 명예교수, 김정남 전 청와대 교육문화사회수석비서관, 이강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등 각계 인사와 유족,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DJ 모교’ 목포 목상고 이설 난항

옥암동에 247억 들여 2019년 옮길 계획

교육부 “도교육청 예산으로” 조건부 승인

전남도교육청이 남악 신도시 고교 부족 해결을 위해 추진 중인 목포 목상고 이설이 난항을 겪고 있다. 관련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다.

16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목상고등학교를 남악신도시로 옮기기 위해 목상고 이설 동의안을 최근 도의회에 제출했으나 보류됐다. 도의회는 목포시의 지원계획이 확정되지 않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미비했다며 이를 보류했다.

목상고는 2013년부터 건물이 낡고 학생 수가 줄어 옥암지구로 학교를 옮기자는 요구가 제기되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의 의견을 수렴해 이전을 추진하고 나섰다. 1920년 설립된 목포 상고의 후신인 목상고는 김대중 전 대통령, 양재봉 전 대신증권 회장, ‘무소유’를 실천한 법정 스님 등 졸업생 2만6000여명을 배출했다.

전남교육청은 남악 신도시에 있는 목포시 소유부지 옥암동 대학부지 1만8000㎡를 무상 임대해 24학급 648명 수용 규모로 247억여원을 들여 2019년 2월 이설 완료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4월 투융자 심사에서 옥암지구는 인구가 늘지 않아 학교 신설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며 부적정 통보를 했으나 지난 8월 열린 중앙투자심사에서 교육청 자체 예산을 마련하라며 조건부 승인을 했다.

전남교육청은 교부금으로 학교 이설을 추진하려 했지만 교육부가 조건부 승인함에 따라 예산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교육청은 이설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백련지구로 이전이 결정된 청호중학교와 목상고 부지를 팔아 공동주택 설립을 위한 학교 부지 용도변경을 목포시에 요청했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에 따라 교육청 차원에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이설동의안을 도의회에 내고, 목상고와 청호중 부지 매각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 요청을 한 것”이라며 “재원만 확보되면 이설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감기같은 ‘크루프’ 조심하세요

기침·호흡곤란·기도 폐쇄 등 3세 미만 위험

아이들에게 흔한 질환 중 하나인 ‘크루프’(croup) 를 조심하라.

사전적 의미로는 ‘아이들이 기침을 많이 하고 호흡곤란을 일으키는 병’으로 정의되는 이 질환은 우리나라에서는 ‘급성폐쇄성 후두염’으로 알려졌다.

이 질환은 3세 미만의 아이들이 걸렸을 경우 자칫 기도 폐쇄로 질식 상황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조심해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큰 일교차로 환절기 감기가 부쩍 늘어나는 시기에는 증상이 비슷한 감기와 구별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크루프는 가을, 겨울철에 생후 3개월부터 5세 미만의 아이들에게 잘 생긴다. 크루프가 다른 질병보다 더 위험한 이유는 후두와 기관지 부분에 생긴 염증으로 후두점막이 부풀어 오르면서 기도가 좁아지고, 그로 인해 호흡곤란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질환은 I·II형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parainfluenza virus)나 A형 인플루엔자 바이러스(influenza virus) 등의 바이러스가 원인이다.

크루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면역력 강화에 힘쓰는 것이 최선이다. 손이나 타액, 공기 중에 떠도는 타액의 미세분말 등으로도 감염될 수 있는 만큼 외출 후엔 꼭 손발을 씻어 청결을 유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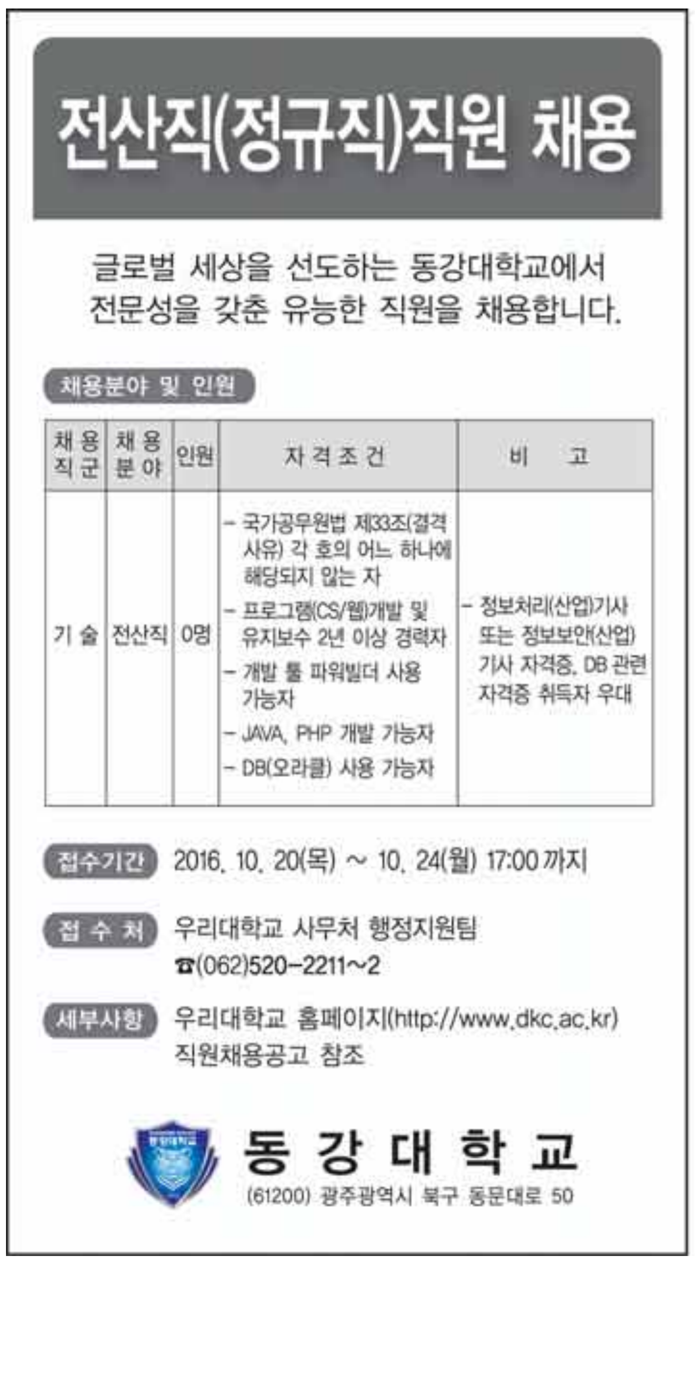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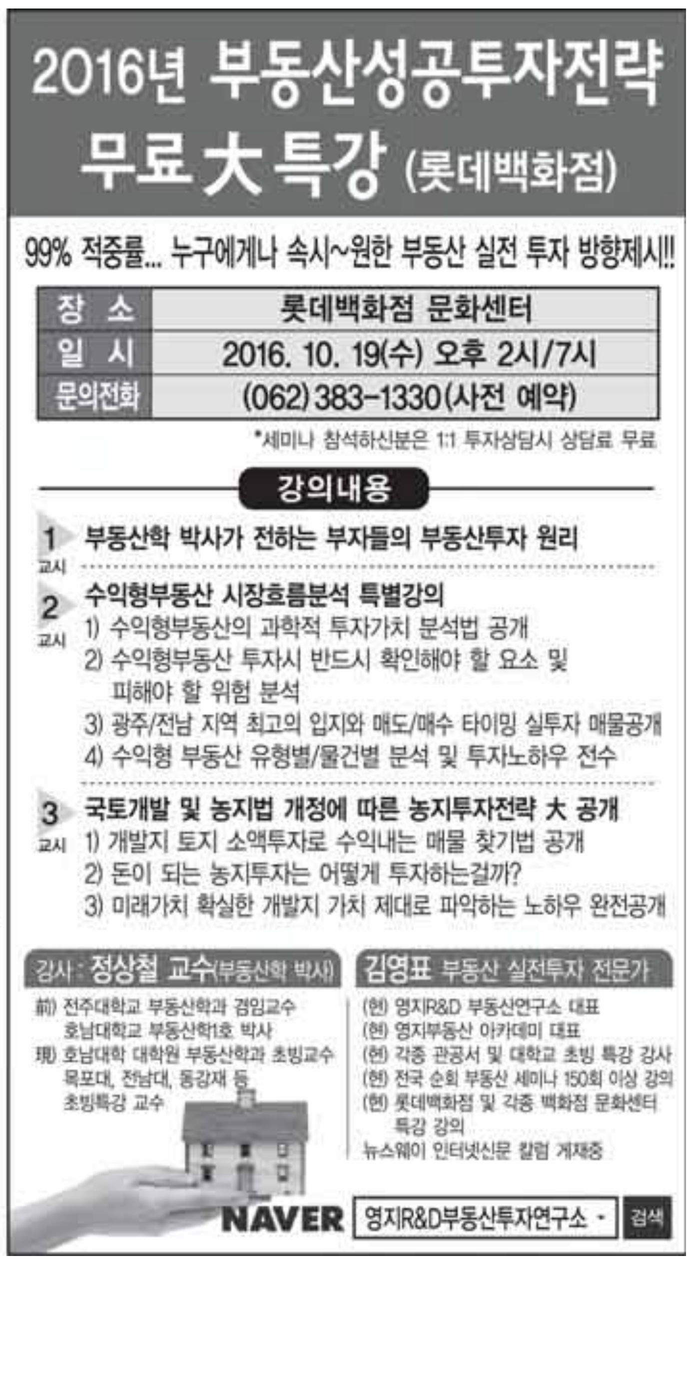
/연합뉴스

美 비자 신청시 안경 벗은 사진 제출해야

앞으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면 비자 신청 시 반드시 안경을 쓰지 않는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미국 연방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1월부터 비자나 여권 신청서를 접수할 때 안경을 쓴 채 찍은 사진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는 비자나 여권 신청자의 안면 인식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무부는 “안경은 위장이나 위·변조에 활용될 수 있다”면서 “안과 수술을 받았거나 긴급한 건강상의 야유로 안경 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진단서나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야 한다”고 했다.

/연합뉴스